

2021/22 몽골 KSP 세부실태조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22. 6. 7.(火)

I.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몽골 정부는 고용의 50%, GDP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농식품업 및 경공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및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 희망
 - 본 사업을 토대로 보조금 사업의 계획 수립,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사후 관리 및 성과 평가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 운영 시스템 갖추고 보조금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위와 같은 사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하여 아래 3개 세부주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

< 2021/22 몽골 KSP 사업 구성 >

사업명: 몽골 농식품업 및 경공업 보조금 제도 개선 방안

수석고문: 이준원(前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업책임자: 방호경(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사업관리자: 전영진(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	세부주제	연구진
1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 제도 현황 분석 및 예산 배분 적정성 제고 방안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	농식품업 보조금 지원 제도 평가 및 개선 방안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농식품업 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방안	김성훈 (충남대학교 교수)

- (추진 경과) '21년 9월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 운영계획 협의 후,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화상회의를 통해 착수회의('21.11),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21.12~'22.1) 및 주제별 연구 점검회의와 유관 한국 기관 면담('21.3)을 추진

II.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개요

- 기 간: 2022년 4월 6일(수) ~ 13일(수),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 장 지: 몽골 울란바토르, 세르겔렌, 테를지
- 주요활동: 주제 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농식품 보조금 정책과 예산 현황, 관리 및 평가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농축산업 농가 방문을 통해 보조금 수혜자 체감 분석을 실시
 - (협력부처 회의) 협력부처 및 주제별 현지전문가 회의를 통해 정책 자료를 취득하고 사업 중간점검 및 향후 연구 집필 계획을 논의
 - (기관 방문) 농촌진흥청 등 한국 기관과 몽골농업대학 등 학계, 몽골 농업협회, 축산협회, 양모협회 등 분야별 관계기관 면담을 통해 농식품 보조금 정책 자료 취득 및 보조금 집행 실태에 관한 관계자 의견 청취
 - (현지 시찰) 보조사업 대상 농축산업자를 방문하여 보조금 체감 효과와 수혜자 측면에서 정책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
- 출 장 자(총 3인)

#.	성 명	소 속	역 할
1	방 호 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책임자
2	전 영 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관리자
3	김 성 훈	충남대학교	선임연구자

III. 주요 출장 결과

- ◇ 이번 현지조사는 몽골의 농축산업 보조금 현황과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부처 정책결정자(차관, 장관자문관, 재무·기획국장 등)와 각계 농·축산업협회 및 몽골농업대학, KOPIA 등 전문가 면담을 진행
 - 현지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평가 및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과 동시에 집약축산 비중의 확대, 채소 자급자족 방식 마련이 부처의 핵심 수요이자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발견
 - 이러한 부처 수요 파악을 토대로 농축산업 관계자 및 수혜자 등을

- 면담한 결과를 반영하여 몽골 농림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
- ◇ 특히,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사태로 식량자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연일 국민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채소 재배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음을 발견
 - 관련하여 몽골의 농업선진화를 10여 년째 지원 중인 KOPIA 몽골 사무소를 방문하여 몽골 내 채소 재배 관련 기술적인 부분과 적용 가능성 및 고려사항을 논의
 - ◇ 기타 양 국 간 농축산업 분야 유망 협력 분야로 농산물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서 한국의 기술과 인력 및 자원 패키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
 - 예를 들어 온실하우스 기술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1단계), 이후 정밀농업과 스마트팜 구축을 지원한 뒤(2단계), 식물공장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판로확보 지원(3단계)이 가능함을 검토
 - 이 과정에서 농자재 및 종자, 시설원예 및 양육재배 설비 판매 뿐 아니라 수확 후 관리 기술 전파까지 가능함에 대해 논의
 -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앞 다투어 몽골의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몽골인이 한국에 특히 우호적이고 도시 곳곳에 한국 식문화(이마트, GS편의점, 도시 전역의 한식당)가 퍼져 있기에 한국의 강점도 충분
 - ◇ 향후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몽골의 농축산업 시계와 정책 일정을 고려하여 6월 중순 방한하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하고 8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논의

III. 세부 논의 내용

< III-1. 협력부처 및 현지전문가 미팅 >

1. 차관 면담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8일(金) 10:30~11:30, 몽골농식품경공업부
- 참석: 바트소리 차관, 강조릭 과장,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칸드수렌 교수(몽골농업대학),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 국민의 현안이자 농축산업경공업부와 재무부의 현안인 농축산업 보조금 관련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해준 기재부와 KDI에 사의를 포함.
- 현재 몽골농축산경공업부의 주요 정책현안은 1) 원활한 식품공급, 2) 식품안전, 3) 식량수출 세 가지임.
 - 1) 식품공급은 코로나로 중국과의 국경이 봉쇄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로부터의 식량공급이 중단되어 국가 내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귀현상이 발생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 2) 식품안전은 현재 몽골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목민들이 생산하는 육류의 안전문제 발생과 이에 따른 공장고기 육성의 필요성
 - 3) 식량수출은 몽골의 주요 산업으로서 광업과 농축산업이 있는데 국가의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식량 수출의 필요성에서 비롯됨.
- 농림부의 최우선 정책현안은 기후별로 지역을 나눠 각 지역에서 잘 육성하는 농축산품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기후 기반 농축산업 육성 전략”으로 이는 신정부 “신개선정책”의 핵심정책이기도 함. 본 전략은
 - 도시 위주의 중부지역은 밀농사와 채소농사를 집중 육성하고,
 - 초원 위주의 동부지역은 밀농사 외 양, 소, 말 등 가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 산악 위주로 기후변화가 심한 서부지역은 야크와 염소 및 캐시미어 등 부산물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함.
 - 본 정책은 현재 4월 6~8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몽골 경제 포럼”에서 정부 관계부처 뿐 아니라 대내외도 중요한 전략으로 소개됨.
- 한국 측은 그간의 조사 결과 축산 분야가 전통적인 분야로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밀과 야채 등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특히 예산 형성과 농가 등에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 중
 - 잠정적으로, 보조 사업 평가를 관리하고 예산을 줄이거나 보조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몽골 측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정부 입장에서 보조사업 성과가 미흡할 때 보조 사업을 중단 또는 대체하는 결정을 해야하나 이 때 농가 반발이 상당하기에 부처의 고민이 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전 한국을 포함 모든 나라 동일
 - 정부에서는 숫자 또는 지표 등 객관적인 측정과 기준을 통해 기존 보조사업 유지, 변경, 축소를 심의함으로써 생산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고 있음.
- 최근 5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농민 대상 직접 지원보다는 농가 생산력과 농산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농가기술과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변경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던 운송비에 대한 보조를 하던 것을, 물류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지원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농민에 간접 보조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 농가 개인 대신 농민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집단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함.
- 이렇듯 여러 정책 대안이 있으나, 양 국 간 환경이 다르기에 몽골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하는 것이 우리 측 과제
 -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농장 등 집약시설을 통해 축산업을 운영하기에 집단 관리가 가능하나, 몽골은 유목을 통하기에 관리와 정책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음.
 - 육류는 HACCAP 등 식품안전성을 가진 시설에서 도축을 해야하나, 몽골에서는 전통적인 재래방식으로 도축하고 유목민이 시장에 가져다 파는 문화가 여전하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임.
 - 몽골은 유목민 기반의 축산업을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것은 몽골의 전통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안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축산품 유통은 국민 보건과 상충하기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채소의 경우 겨울이 길어 생산이 길은 몽골의 자연여건을 고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재배 등 대안을 통한 농업과 식량자급화의 방안으로 무엇이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

- 보조금 외 다른 펀드를 활용할 방안과 최소의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또는 협력 프로그램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임.

< 사진 >



몽골 농림부 차관 면담

2. 재무투자국, 경제연구분석국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6일(水) 16:00~17:30, 몽골농식품경공업부
- 참석: 옹골세그 국장, 바트조릭 사무관(재무투자국) 암갈란 서기관, 잘가사르 사무관(경제연구분석국), 강조릭 과장, 양크미셸 서기관, 타난 사무관(국제협력국),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국장은 재무부 재정투자과 과장으로 15년 근무하며 KOICA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하고, 재무부 근무시절에는 세금제도 및 국부제도 개선 관련 한국과 교류협력을 한 바 있음.
 - 2015~16년도에는 보건부에 근무하며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몽골에 도입하는 업무를 한 바 있음. 한국과의 협력사업은 모두 몽골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몽골 측은 본 사업에 대한 기대도 높음.

- 몽골에서 농축산업은 광업과 함께 몽골 경제 산업구조의 핵심 축이며, 보조금은 농축산업 특정 분야에 대한 타격이 있을 때마다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5개 산업에 대해 현금보조 실시
 - 가령, 2010년 기후변화로 흉작이 발생한 밀농업 대상 현금성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경기침체 타격을 받은 양모 가공업,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수출에 타격을 받은 캐시미어 대상 보조를 시작함.
 - 특히, 2020년 코로나에 따른 중국의 국경봉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와의 무역 중단으로 농산물 수출입에 큰 타격을 받으며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국가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
 - 현재 몽골의 농업 경작지는 100백만 헥타이며 이는 전체 경작가능 면적의 80%에 해당함. 몽골은 열악한 기후, 부족한 수량, 기후변화 등으로 논, 밭농사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한계를 지님.
- 축산 분야 관련, 몽골에는 7,000만 두의 가축이 있으나 유제품 및 육류 모두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있음.
 - 겨울철 유제품 및 육류소비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겨울농장 운영을 통한 식량자급자족 문제 해결이 농업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 이러한 배경에서 2022년부터는 우유 생산 농가 대상 5년 기간의 지원하기로 정책적으로 결정
- 현재 보조 정책에 대한 평가제도, 기준 및 법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보조금은 지속 지급되고 있음. 이는 정부 재정 부담과 동시에 국회로부터 사회복지와 다를 바 없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직면
 - 특히, 2022년부터 교육, 보건, 농업 분야에 대해 “결과 및 성과 기반”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보조금의 예산집행과 성과를 분석하는 본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 적절함.
 - 향후 농업 분야 예산을 계획하고 재무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과, 현재 추진 중인 보조금의 성과와 중단해야할 보조금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본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참고로, 몽골은 농축산업 기반 국가로 예산권한을 가진 재무부조차 보조금의 중단에 따른 농축산업자들의 반발을 막지 못하며 생성된

- 보조금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
- 현금 보조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지속 및 중단 여부 결정, 중단 시 출구전략 마련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 공유가 절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을 통한 기대 사항은 아래 세 가지로 요약
 - 1. 몽골 정부가 시행 중인 농식품 보조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 2. 보조지원 정책의 지속 및 중단 기준 제도 마련
 - 3. 현금성 보조지원 외 세금면세, 납세 등 관련 한국의 경험 전수
 - 한국은 정부 출범마다 5년 주기의 부문별 정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농업 부분은 농업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외식산업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며 보조사업도 해당 기본법 내 세부 전략으로 수립해야 함.
 - 보조 사업은 평가를 통해 유지, 중단, 예산삭감, 사업방식 변경 등에 대해 매년 판정을 받게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농식품부가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보조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숫자에 기반 평가지표를 만들어 해당 보조금이 숫자기반 평가지표를 충족했는지가 주요 기준이 됨.
 - 또 다른 주요 기준은 지원 예산의 집행율임. 책정 예산의 90% 미만 집행 시 “주의 과제”가 되어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함. 수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보조사업 삭감 시 수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보조금의 연속여부 결정 관련, 농식품부에서 자의적으로 보조금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음. 예산을 줄이면 부처 차원에서도 차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며 수혜자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무조건적 삭감보다는 컨설팅 등을 받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보조금의 연속여부를 결정
 - 다만, 보조금의 무조건적인 방어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에서 농식품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보조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보조사업의 폐지까지 권고 또는 명령하도록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연장평가는 3년 마다 추진되며 삭감 시 소폭삭감, 대폭삭감 등 예산 삭감의 비중과 기간과 또 다른 보조사업과의 통폐합 등 기준 명시

- 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담기는 “평가기준”으로 한국은 보조사업의 법적기반, 수혜자 범위,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 달성 여부, 최근 3년 예산집행률, 부정집행 및 국회와 언론의 지적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
- 보조사업 평가지표로는 투입지표(정부예산과 인력의 투입), 과정지표(공정률, 달성률 등 진행상황 점검), 산출지표(1차적인 정책의 효과), 결과지표(최종적인 산업과 사회에의 효과 달성 여부)가 있음.
 - 한국은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경제학적 연구와 통계자료 활용이 요구되며, 외부요인으로 인한 왜곡된 성과판정이 발생하기도 함.
 - 양 농가 보조금의 경우, 양 농가 대상 보조금액(투입지표), 양모 가공시설의 공정률(과정지표), 양 농가들의 소득 증가여부(산출지표), 양 산업의 경쟁률 제고 및 실업률 축소(결과지표)가 될 것임.
 - 다만, 최근 코로나 등 대외변수로 갑작스레 수출이 줄어 결과지표가 나오지 않는데, 이러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결과치 편향을 감안하여 최근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합쳐 결과를 도출하는 모형을 사용
- 농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보조금 정책은 한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나 농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쌀을 버리거나 소를 끌고 국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습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평가법 등 법에 명확한 기준과 법에 기반해 보조금의 지속과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수혜자 반발을 최소화함.
 - 동시에 전문가들이 언론에 보조사업의 중단 등에 대해 언론에 기고 또는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
 - 아울러, 보조금을 없애는 데 따른 대안을 제시함. 한국이 WTO 가입 후 수출농가 대상 물류비용 보조가 어렵게 되었을 당시, 정부가 물류업체와 협의하여 농가물류 비용을 절감하도록 중재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이를 통해 물류업체의 인프라 증축에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물류업체의 생산성 제고 및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함.

< 사진 >



몽골 농림부 재무투자국 및 경제연구분석국 면담

3. 기획국 및 장관실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7일(木) 17:00~18:00, 몽골농식품경공업부
- 참석: 불로초롱 기획국장, 오드문크 장관자문관,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에의 시사점 제시를 위해 한국의 보조금 산업 현황을 논의
 - 한국은 축산농가, 도축업체, 가공업체별로 각각 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 특히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도축 및 육가공 공장 대상 지원과 보건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많음.
 - 예를 들어 식약처 "K-FDA" 법에 의거,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육류 가공도축 업체는 HACCAP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운영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한국 농식품부는 농가 및 생산자가

- HACC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과 기술 지원을 실시함
-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끼리 연합체를 형성해 비용 분담을 통해 집단적인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국가는 이를 “자조금 단체”로 규정하여 집단이 모집한 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제공함. 현재 한국에는 돼지, 소, 우유 등 각 생산자별 자조금 단체가 존재
 - 농가 자체의 수익만으로는 마케팅 등 판매루트 개척과 R&D 실시에 비용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데, 한국 정부는 농가가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농가의 판매루트 개척과 R&D 및 기술지원 등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함.
 - 가축의 보건 문제 발생 시에는 농가의 손실 보상 및 가축 매장 등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시
 - 도축 공장은 이미 고도화되어 있기에 더 이상의 별도 지원은 없으나, 가공식품업체 등 수출 특화 도축업체는 예외적으로 마케팅, 바이어 소개, 수출관세 면제 등 지원정책을 실시
 - 아울러 농협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도축 및 시설 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전을 보장
 - 전체적으로 한국은 농가 대상 직접 지원은 줄이고 가공과 수출, 특히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는 추세
- 농가 직접 지원 대신 수출과 가공 쪽 지원을 통한 축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산업 발전 가능성을 논의함.
 - 몽골에는 양, 염소 등 품종별 별도의 생산자 조직이 없는데, 농민관리 입장에서 국가에게도 조직화된 생산자 집단과 이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조금 관련 프로그램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몽골에는 양, 염소 등 품종별 별도의 생산자 조직이 없음. 이에 따라 각 농가들별로 필요에 따라 생산물을 팔고, 세금회피를 위해 국가에 사업체를 등록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재래시장에 파는 상황
 - 이는 결국 정기적인 육류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에 따라 육류업체들은 육류를 납품받기보다 직접 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육류를 구매해오는 실정

- "고기기술 생산 기준 설정" 법에 의거 육류생산과 납품 관련 규정이 존재하나 세부사항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바, 정부가 규정제정 및 집행 측면만 노력해도 해당 문제는 해결될 것임.
- 한국의 보조금 데이터 수집 및 등록방법, 아울러 보조금 등록과 지급의 기준(예를 들어 면적에 따라 지원할지, 생산품종에 따라 지원할지 등)과 방식 전반을 논의
- 첫째 한국은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이 각 성격에 따라 등록과 지급방식이 모두 다르며 대표적인 것만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음.
 - 1) 농기계 보조금은 농기계 구매 시 낮은 용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국가가 농기계를 빌려주고 수리해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
 - 2) 비닐하우스 등 시설하우스는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거치 저이율로 지원함. 이전에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였으나,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및 산업 육성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 중. 이는 기재부에서 직접 돈 지급하여 재원을 소진 하는 것보다, 정부지원 사업의 재원을 환류 또는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 3)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해질 경우, 정부가 비축사업을 진행. 특히 한국의 주식인 쌀은 이미 공공비 수요를 초과해 시장가격이 떨어지므로 비축 사업이 계속 진행 중.
 - 예전에는 정부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시스템이었으나, 현재는 정부가 일부 쌀을 구매해 가공, 해외원조, 수출용도, 저소득 및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공공미로 활용 중
 - 이렇듯 국내에 도는 쌀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며 쌀의 경우 3년 치를 저장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 4) 생산자 조직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조금 단체(비용)를 지원. 예를 들어 각 생산자 단체가 회비를 걷어 협회에서 기금을 형성하면 동일한 기금을 정부에서 지급
 - 협회는 해당 기금을 통해 생산 외 홍보, 생산기술개선을 통한 품질개량, 농민교육,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등 생산자들이 자신의 산품을 팔기 위한 전략을 시행

- 또한 물량이 많이 생겼을 때 잉여량이 시장에 돌지 않도록 시장 공급량을 줄이고 대신에 학교 등에 지급하도록 기금을 사용
- 5) 농민에게의 직을 돈을 주는 제도도 최근 증가 추세. 예를 들어 쌀 재배 농가가 너무 많기에, 쌀 대신 다른 품목을 재배 시 거기에 대해 일정소득을 직접 보조
- 6) 농민이 소멸해가는 농촌에서 공공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농민 직불금을 지급하기도 함. 이 경우 재배면적 당으로 지급하고 통상 한달 생활비의 10~20%를 지급함.
- 7.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경쟁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이는 투표에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함.
 - 다만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은 개별 농민 지원이 아니라 농민단체 및 농산업 전체의 생산력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수당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임.
-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우선 한국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의 자격과 기준을 규정함. 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이상 농업활동을 해야 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는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 주소, 생산품종, 생산량, 재배면적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농업인 자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음.
 - 동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보조금은 해당 농민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됨.
 - 그 외 신청기반 보조금은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함. 예전에는 우편, 요즘엔 휴대폰으로 효율적으로 정보 제공하고 기타 보조금 신청 안내

< III-2. 관계기관 미팅 >

4. 몽골농업기금(Mongolian Agricultural Support Fund)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7일(木) 09:00~11:30, 몽골농업기금

- 참석: 볼드바야르 사장, 볼로마 부사장, 감바트 재무회계투자과 과장, 친저릭 보조부서 과장(이상 몽골농업기금),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농업기금은 농업펀드와 축산업지원펀드를 통합하여 2020년도 몽골농업기금으로 설립되었으며 몽골농축산경공업부와 기타 기관의 농축산업 지원 정책을 중재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곡창 지대를 중심으로 울란바토르 외 슬랑그 아이막 수그바타르, 블망 아이막, 다르강 아이막, 우그라한 아이막, 투그락아이망의 옥탈차 이담, 행티아이막 우문딜레 총 7개 아이막(도)에 지점을 갖고 있음.
 - 기금은 18만 8000천의 밀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밀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1년 몽골 밀 수요의 60% 가까이 저장 가능
- 1단계 원료 생산, 2단계 부가가치 생산, 3단계 국민생활의 개선이라는 3단계 각각의 단계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사업을 시행
 - 1차 “원료 생산”은 밀, 채소농사 대상 기술 지원, 종자 지원, 농업 보호 지원, 비닐하우스 및 기계장치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시 농가가 30~50%의 비용만 부담하고 차액은 이자 없이 추후 수확물로 상환함으로써 현금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
 - 2차 “밀 공장, 채소 가공 공장 등 부가가치 생산” 지원의 경우 잉여 종자를 구매하거나 펀드가 보유한 18.8만톤 규모의 저장고에 농가의 산품 보관을 지원하고 추후 가공농장에서 필요시 해당 산품을 지원
 - 3차 “국민생활의 개선”은 1~2차 단계에서 고려되는 생산자 차원의 지원을 넘어 펀드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생활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임.
- 기금 측으로부터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펀드 보조금 지원 통계자료, 2013~14년도 Altankhuyag 국무총리 지시로 토니 블레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련된 “Wheat subsidy-policy analysis briefing” 보고서를 제공받음.
 - 다만 이 내용은 영국 정부에서 밀의 농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등이 있어 몽골과의 이견이 많았고 민감한 주제였음을 감안해야 함.

- 한국 연구진도 식량 안보 측면에서 몽골은 밀 수입보다는 생산을 통해 자급자족을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
 - 최근 식량인플레(agroplation) 사태가 일어난것처럼 동남아에서 식량 자급 문제가 생겨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정권 위협에 처한 바가 있음.
 - 특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촉발된 곡물가 상승은 지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곡물가 상승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 물가 상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아울러 기후변화로 밀 수요 공급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 이 때 현재 펀드에서 하고 있듯 비축을 통해 수요공급에 적극 대응해야 함.
 - 한국은 정부가 주식인 쌀을 “공공미”로 구매하여 3년 간 비축하고 가 공업체에 저가 판매, 저소득층 무상지급 등 공공복지성으로 사용함으로써 수급에 적극 대응
- 현금, 구매비용 지원, 비축된 밀을 싸게 공급하는 사업, 여러 지원이 있는데 농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 소득세면제, 세제지원(농기계, 자재, 비료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1.2만톤의 “러시아 엘리트” 밀 종자를 정부가 수입해서 시장 가격에서 30% 할인 가격으로 전체 농민의 85%를 차지하는 소농에 제공
 - 기금에서 7개의 지역에 각각 소유한 “엘리베이터르 공장”을 통해 밀 비축 및 소농 대상 밀 건조, 세척 작업 등을 지원. 이는 대기업과 달리 소농은 해당 설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엘리베이터르 공장은 전체 설비가 18.8만톤 규모이며 이중 6.5만톤 규모의 저장소에 밀을 저장하고 1.8만톤은 종자 저장, 2만톤은 밀 농가 임대 물품 저장
 - 기계장비 할부판매, 렌트(소규모) 및 수리관리 진행에 대해서도, 농업 부에서 직접 밀 사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에 기반하여 지원
 - 농림부의 농가 지원: 세제, 현금보조, 휘발류 지원, 농약 지원, 비료비 할하우스 할부지원도 실시
- 현금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의 공동명령 및

규정에 따르며 예산규모 등을 매년 책정

- 성과 평가 및 관리 분석 관련, 펀드 측은 회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나 성과 관련 자료는 펀드에서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공하지는 않고 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진행
- 농가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나 협회, 시스템의 존재 여부 관련 밀생산협회가 2개, 채소생산협회가 있음. 이 쪽에서 농업부와 펀드에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인적인 문제의 경우 직접 연락할 수 있음.

< 사진 >



몽골농업기금 미팅 사진

5. 몽골육류협회(Mongolian Meat Association)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7일(木) 13:30~15:30, 몽골육류협회
- 참석: 오치르бат 협회장, 도축·가공·수출업체 “아그로닉트벨”, “다르항미트”, “불강미트” 대표, 육류업체 “바흐임팩스” 대표, 도축업체 “잘로트” 대표, 육가공업체 “트러스트 트레이드” 대표, 바트조릭 사무관, 탄난

사무관(이상 농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육류산업 관련 예산과 정책 및 제도를 몽골 농림부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 보조금이 육류산업의 발전과 목축 농가의 소득 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수혜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본 면담 진행
- 축산 분야는 다른 분야 대비 현금성 보조금이 많지 않음.
- 육류산업은 국내 공급이 1차, 수출은 2차 목표임. 긴 겨울철과 짧은 도축 기간으로 국내 공급에 제약이 큰 몽골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림부는 매해 9월 도축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겨울철 국내 소비용 육류생산을 관리
 - 생산된 고기는 국가가 저장시설을 통해 보관하고, 차년도 소비될 때 고기값과 생산비 간 차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의 경우 수출세 면제를 통해 생산업자 및 목축업자를 지원
- 육류생산공장 사업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공장에 육류를 납품하는 축산업자 대상 보조금의 없다는 것임. 축산업자 입장에서 공장보다 시장에 파는 게 이윤이 높기에 갈수록 공장에 육류를 납품하는 축산업자 수가 줄고 있음.
 - 아울러, 공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값을 넘어 안전한 육류가공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정부에서 수출을 권고하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은 부족하고 고금리의 대출 등만 지원하는 실정이며 특히, 생산 육류의 10~20%를 국내에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약도 많음.
- 육류협회는 보조금 보다는 국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마련해주는 한편, 관련 제도들을 마련한 뒤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요구함.
 - 1) 국민의 식품 안전보건을 위해 안전시설에서 도축되고 가공되는 육류 소비권장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 2)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축 질병 관리 등 가축 보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3) 수출지향 육류업체를 대상으로 제시하는 정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육류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와 농가에의 설명을 희망

- 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운영이 요구됨. 예를 들어 2014년 목축법을 마련하며 세부 사항으로 “고기가공 기술에 기반한 육류 공급을 권장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실제 관련 지침은 부재한 상황
- 실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모두 도축 전후 검사를 실시하는 나름 선진 업체들이고 실제 국민의 식품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인정과 인식이 부재함.
- 목축법 7번 조항에 따르면 “모든 식용 육제품의 경우 가축 및 도축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 실제 기준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고 그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육제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
- 그 결과, 업자 입장에서 공장을 설립해도 원료를 제공하는 생산자 및 공급자가 부재하고 이를 지원 또는 중재하는 정부의 제도 또한 부재
- 95~97년도부터 광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5천억 투그릭을 투입해 “몽골가축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협회나 목축업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고 시행정책도 본 경험이 없음.
 - 울타리 설치, 우물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했다고 하나, 각 지역에 퍼져있는 협회 소속 인원들로부터 들어봐도 해당 정책의 시행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음.
- 정부도 외국의 압박 등 여러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에서 몽골의 요청도 없이 7,200만불을 투입하여 몽골의 육류생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당시 중국 정부는 육류수출입 제한으로 압박하며 프로그램을 강행하였다고 함.
- 한국의 축산업은 축산농가, 도축업체, 가공업체별로 각각 다르게 지원함 특히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 도축 및 육가공 공장에 대한 지원과 보건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이 많음.

< 사진 >



몽골육류협회 미팅 사진

6. 몽골축산수의학대학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8일(金) 14:30~16:00, 몽골축산수의학대학
- 참석: 바타르척드 축산대학장,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 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양털 생산업, 양가죽 가공업, 양고기 생산업, 밀 생산업, 우유 생산업 총 5개 보조금 대상 산업의 주요 추이 및 문제점
 - 몽골 정부는 최근 5개 대상 산업 중 일부를 제외하려 하였으나 농가 반발로 현행 유지 상태임. 그러나 캐시미어 산업은 이미 발전된 상황이기에 원료에 대한 추가보조금 지급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
 - 양가죽 가공과 양고기 생산업 관련, 기존에서는 산업발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과학적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지원 등으로

- 정부정책의 초점이 변경되고 있으며 원료 수출 방향도 대두됨.
- 축산은 도축 시설 미비 등 도축 절차가 선진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5개 보조금 대상 산업의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향후 몽골 국가 차원에서 중요 또는 유망한 산업 분야를 논의
- 몽골의 산업구조는 광중공업과 농식품경공업 두 분야로 구성되며 몽골 경제는 광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다변화하기 위해 식품경공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5개 산업 분야의 모든 원재료가 몽골 내에서 생산되기에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함.
 - 사료작물 종자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 10월 이후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올 때 사료 부족 및 건조 품질 저하로 사료작물의 품질이 저하되기에, 이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통해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몽골의 장기적인 식량자족을 위해 현행 노지보다는 하우스설비를 통한 시설 재배의 필요성이 있는 바, 몽골의 시설재배 현황 파악
- 10년 전에 비해 시설 재배는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비닐하우스 지원 등 관련 지원도 점차적으로 마련되는 추세임.
 - 그러나 몽골은 역사적 그리고 민족적으로 유목민이 대다수임에 따라 축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적으로는 농업을 하기에 열악해, 아직까지는 축산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임.
- 대상 산업 외 정책적 중요도 또는 산업 성장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볼 때,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로는 캐시미어, 양털 산업이 있음.
- 캐시미어와 양털은 중요 산업 자원이나 상당히 낮은 부가가치로 원료의 80% 이상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기에 부가가치를 높여 중국 외 세계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국제사회의 기술 협력이 요구됨.
 - 부족한 인프라로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농업발전 측면에서 밀 산업, 시설원예업, 농산물 유통업의 육성도 고민할 필요

< 사진 >



몽골축산수의학대학 사진



몽골축산수의학대학장

7. 몽골농업대학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8일(金) 16:30~18:00, 몽골농업대학
- 참석: 칸드수렌 교수(몽골농업대학),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보조금 지급 및 관리 실태 측면에서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 종사자의 소득지지 및 일자리 유지, 다음 선거를 위한 지지기반 유지 등 몽골 정부가 생각하는 보조금의 의미와 목적 논의
 - 한국의 경우 최근 농가 대상 월급 성격으로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을 논의하여 논란에 휘말린 바 있음.
 - 몽골에서 캐시미어와 목축 분야는 정부 및 정치인과의 친분에 따라 지급되는 성향도 존재하나, 정권 및 선거와 상관없이 보조금은 매년 지속 유지되며 선거를 위한 지지기반 유지 성격은 크지 않음.
 - 밀의 경우 국제 생산품의 값이 질도 좋고 더 싸기 때문에, 보조지원이 없을 경우 재배할 유인이 없음.
 - 언론 기사, 농가 반발, 산업계 내부 정보 등 최근 보조금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 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몽골 국민들은 보조금 특혜 등 불합리한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에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낮으며 실제로도 별도의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

- 보조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와 성과 평가 및 감사 등의 절차 조사
 - 아이막(도 단위) 지자체에서 대학의 경제, 정책학과 교수를 심사 및 실사팀으로 꾸려 사후평가 및 감사 진행
 - 사후 평가는 실사를 담당하는 학자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 법이나 부처 시스템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2~3년에 한 번씩 수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
 - 한국은 기재부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수급, 과다지급,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정책효과분석 및 사후평가 등 실사를 진행
- 몽골에서 보조금은 제도와 전략 미비 등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에 따라 부처 내에서 지속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계획적 관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 및 산업 육성 목표 설정을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반해, 몽골은 그때그때의 수요와 산업이 타격을 받을 때 마다 정부결의안을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
 - 갑작스럽게 결의안에 형성되고 집행되다 보니 체계성이 부족하고, 수혜자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침을 받다 보니 집행의 체계성 외 구속력 또한 부족한 실정
- 면담 대상자들은 보조금이 몽골의 대상 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기여하는 효과가 적다고 진단
 - 10여년 간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수출 달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특히, 성과가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양털 생산 및 가죽가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하고 대신 원재료 가공 및 수출지원 쪽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
 - 특히, 보조금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양털의 경우 모두에게나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기후변화와 초목 황무지화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는 '모두를 위한 보조' 대신 양질의 양털 가공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보조'를 실시할 필요성 제기

- 보다 정확하게 몽골 보조금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한 세계은행, 독일의 Kiel 박사, FAO가 추진 중인 보조금 효과성 평가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임.
- 대학 측은 기존 품목 외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보조대상 산업으로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 채소 재배 대상 보조지원을 언급
 - 특히 코로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 전역에서 채소 수급의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채소 국내 생산 활성화 논의와 함께 ‘채소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부 사업이 마련되고 있음.
 - 내수 식생활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시설채소 재배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조 사업을 실시할 필요
 - 추위에 강한 순무와 양파, 마늘 등을 중심으로 하우스에서 조기 파종이 가능한 품목을 지원할 경우 보조 효과성이 높을 것임.
 - 아울러 특정 산업에 대한 현금 보조 외 농기계, 연료, 관개시설, 세제 지원 등의 간접 지원도 필요
- 몽골 농림의 부가가치 제고 방안으로 시설 원예의 발전가능성을 논의한 결과, 발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
 - 현재 몽골의 총 시설 재배 면적은 68.4헥타르 중 여름용 시설 재배는 50.9%로 과거 시설재배가 전무하던 시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농산업 분야임.
 - 원예재배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이견이 없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의 필요성은 이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하우스 등 시설자재, 노지채소 종자 개량, 재배·생육기간 연장을 위한 설비 지원 등 직접 보조가 아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도 가능할 것임.
 - 단, 감자는 한국 대비 값이 1/10에 지나지 않고 양파, 당근, 양배추 등은 몽골 내 자급자족 수준을 넘어선 바, 채소에 대한 보조 지원은 시장 경제를 깨뜨릴 수 있는 측면도 유의하여 접근해야 함.

- 채소 지원도 중요하나 몽골은 전통적으로 축산 기반 국가이므로 채소로의 급격한 전환은 자칫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식품 전략 변환이 필요
- 추가 보조 방향에 대한 논의 실시
 - 기술, 장비 보조에 대해서는 유의를 기울여야 함. 현재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성 분석 없이 기술, 장비 보조만 할 경우, 공장만 늘어날 뿐 운영이 안될 것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가 많음. 차라리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신설이 효과적임.
 - 또는 (대규모 공장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아닐지라도) 기술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평가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이 높을 것임.
 - 다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 설비에 대해 보조를 지원하여 이들이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양가족으로 어린이 신발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이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양털은 원재료 형태로 90%가까이 중국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걸 캐시미어 등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함.
- 특정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그룹 육성을 위해 특정 그룹과 산업에의 보조금을 집단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에 대한 견해
 -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그룹과 산업에의 보조금을 집단적으로, 즉 전략적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몽골은 한국처럼 예산 책정 및 집행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고, 해당 그룹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또한 아직까지 전략 산업 육성 및 그룹 육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인 바 보조 대상 전략 산업 육성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현재 보조금이 '생산 농가 대상 지원' 위주인데, 몽골의 정책적 목적인 농축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수출 업체, 기술 업체 대상 지원'으로 하는 방향 설정의 적절성 논의

- 실질적으로 수출할 산업, 항목에 대한 논의, 정책적 제도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가공, 위생관리, 법적기반 마련 후 수출 방향을 설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을 것임.
- 다만 추후 본 사항의 논의가 진척될 경우 현재 수출의 9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의 다각화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수출업체 대상 수출보조는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채소 보조 항목 관련 감자, 양파, 당근, 양배추, 무 등은 보조하면 시장경제에 역효과 및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현재 보조를 하지 않고 있는 품목 중 시장경제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을 품목 선정 필요
 - 시설원예의 경우 재배기간을 늘리거나 재배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 온도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보조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제, 겨울철 온실재배 시 면적 및 생산량 당 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1제곱미터 당 5w의 전기사용 요금 감면, 정부가 대리 납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추가적으로, 자급자족되는 상기 품목을 제외하고 기술교육 실시,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개발 등에 대한 보조도 필요

<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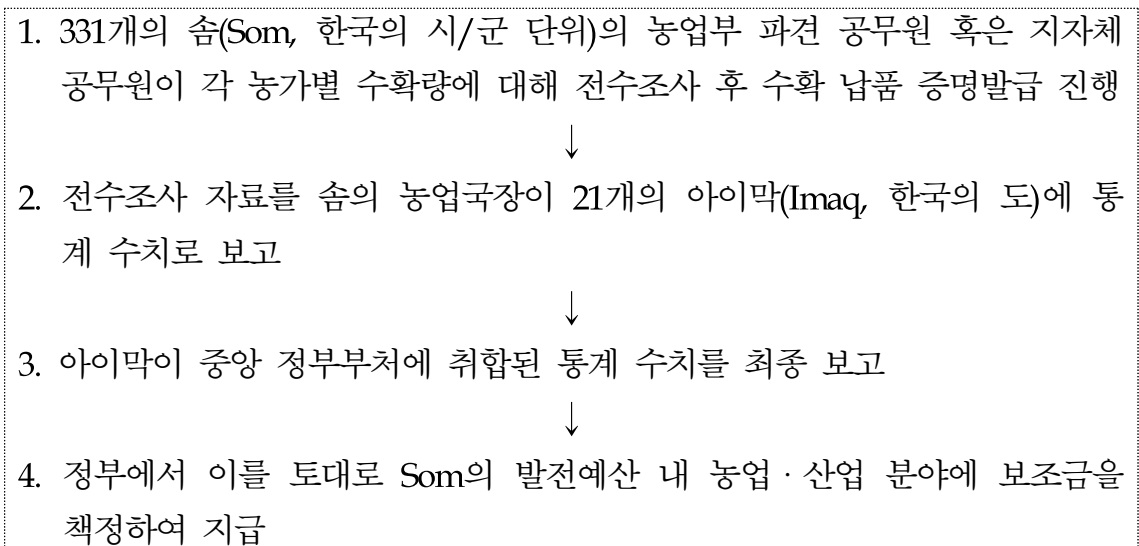
몽골농업대학 미팅 사진

< **III-3. 현지시찰 및 사업현장 방문** >

8. 농민협회(National Farmers)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9일(토) 전일, 농민협회 및 세르겔렌 현장
- 참석: 헤렝게 협회장, 다화후 부회장(셀룽게 아이막), 운드라흐 사장(컨택포인트), 이사장, 명예회장, 투르만득흐 박사, 동부지역 농민협회 대표 다르후, 가장 큰 밀지역인 불강 농민협회장, 힌티 아이막 “척” 농민 대표,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전담기관과 시스템 및 문제점과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및 자격 검증, 지급 방식 및 내용, 부정 수급 관리 등 실무적인 지침 등의 자료 확보 가능성 논의
 -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 관련 수요조사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지급은 정부에서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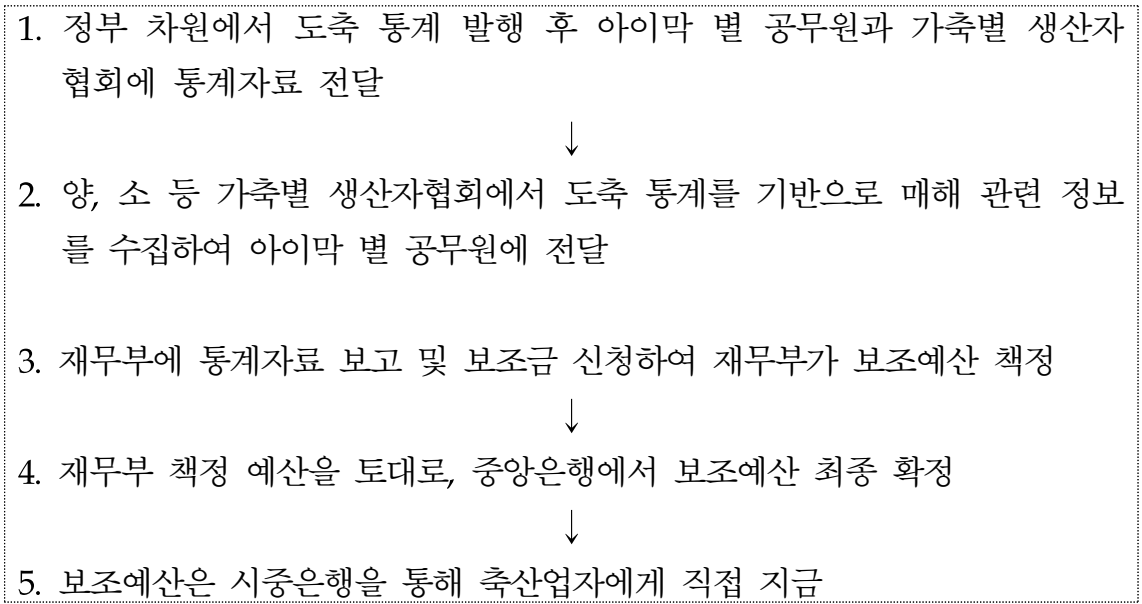


- 지방 정부마다 보조금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농축산 전문가가 1명 존재하며 예전에는 해당 전문가들이 축산계좌("A Account")에

직접 입력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현재는 스위스 정부가 지원한 “녹색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입력을 프로그램화 시켰으며, 이를 토대로 축산품의 원산지 등록과 관련 업체 대상 체계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 축산업은 농업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데, 도축 통계를 기반으로 공무원 대신 각 생산자 협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음. 넓은 영토와 유목 특성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

< 축산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



- 보조금 지원 “결의”에 5대 품목 보조금 지원에 관한 기준, 조건, 방식이 나와 있고 평가 등 규정집 자료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
- 몽골의 넓은 국토에 산재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 관리 체계 및 사업규정, 지침 등의 존재 여부 논의 결과 어느정도는 체계를 갖추고 보조금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숨, 아이막 등) 장을 통해 대상자 전수조사 등의 관리를 진행되는 구조이며
- 수확 납품 증명이 완료되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은 지자체가 아니라 농산품품질관리원의 전수조사에 따라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 및 지급

- 협회 관계자 및 회의 참석 농민을 통해 농산물 생산자 입장에서 보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청취
 - 몽골은 법적으로는 2010년부터 밀 농사 대상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실제 2007년부터 밀 농가에 현금성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보조금은 그간 농가에 큰 지원이 되었음.
 - 보조금은 각 해 경작상황에 따라 1헥터별 5만(한화 약 2만원)에서 10만 투그릭(한화 약 4만원) 사이로 지원금이 달라짐.
 - 2013년에 몽골 국가예산 구조가 변경, 그전에는 정부가 기자재를 구매해서 2~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이후 2013년 국가예산법 개정 후 이러한 지원들이 중단
- 현금성 지원 외 수입기자재 구입과 사료 관세 면제 등의 지원이 실시되어 왔으나 해당 지원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철폐됨.
- 코로나로 인한 중국 국경봉쇄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로부터 채소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올해부터 채소류 대상 보조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농가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음.
- 협회 측은 한국의 쌀 가격 측정 기준과 실제 쌀 시세 변동을 문의하여 한국은 이에 대해 설명
 - 10년 전까지 한국은 정부가 모든 쌀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수매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이는 WTO 등 국제협약에 위반되고 쌀 생산량도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어 현재는 비축사업으로 전환됨.
 -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조절되나 사실상 정부의 비축량에 따라 가격이 조절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가격이 떨어질 경우 농가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기도 함.
 - 한국의 경우 농민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화 되어 있어 정부 대상 입김이 강하고 부처의 대응도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국민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쌀 가격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 협회 측은 추후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희망함.
 - 특히 잉여 생산품 대응 전략과 올해 가을부터 채소 생산자 대상

- 보조금을 지급할 건데 생산자 및 생산품 등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희망
- 특히 농촌 인구 감소는 몽골에서도 동일한 고민인 바, 관련된 한국 사례와 정책대응 경험도 몽골 정부와 농민 측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몽골의 농산물 생산 대안으로는 유리온실,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데 유리온실은 비용문제, 스마트팜은 생산성 및 유지관리 문제가 있는 반면 비닐하우스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몽골의 기후여건 상 노지에서는 5~8월 사이에만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데, 비닐하우스 활용 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과채류 대신 엽채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 기간을 3~10월 까지 늘릴 수 있음.
 - 일본에서 유리온실 육성 사업 "Everyday Farm"을 실시하였으나 온도, 건조권, 수분 문제 등 여러 기후 여건이 열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커서 결국 사업은 실패하였음.
 - 몽골의 겨울은 영하 4~5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과 여름 사이 밤낮 길이 차이가 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 설비 구축과 운영비용 지출이 클 수밖에 없음.
 - 스마트팜도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몽골 겨울의 일조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여 보조 광을 설치해야하기에 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
 - 비닐하우스는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우박, 폭설, 폭우 등이 없기에 유지보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임.
- 결론적으로, 몽골에서 채소 자급자족과 수급해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실제 사업성도 높으나 인력양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관건이고 시설 원예의 경우 숙련된 인력과 관련 경험이 상당히 부족

< 사진 >



농민협회 미팅 사진



지역별 협회장 면담



협회 보유 종자저장소 현장



협회 보유 농기계 저장소 현장

9. 테를지 목초지 방문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10일(日) 전일, 테를지 목초지
- 참석: 테를지 목초지 사업장 관계자 및 유목민, 바트조리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현재 몽골의 축 가축수는 7,000만 마리인데 몽골 목초지에서 수용한 가축 수는 9,000만 마리임. 그러나 일부 목축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축산 가능 능력을 이미 초과하였고 토지 또한 황폐화된 실정임.
 - 주요 가축인 염소는 식물을 뿌리째 섭취하기에 종자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침.
 - 현재 염소와 염소 털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기후변화와 사막화가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
 - 해당 보조금 지급 확대에 의해 유목민의 염소 축산이 증가하고, 과

- 도한 염소 수 확대가 목초지 및 초원의 황폐화와 결과적으로 사막화의 가속현상을 초래
-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양과 염소를 70:30의 비율로 관리하고자 하나, 실제 이와 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틀이 현장에서는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 일종의 정책-현장 간 괴리가 발생
 - 참고로 몽골의 사막화와 기후변화는 세계 평균의 2~3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음.
- 토지황폐화를 막기 위해 염소를 줄이자고 하나, 농가는 염소 소득이 더 많으니 염소를 늘리는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음.
- 유목민에 따르면 비용과 기술 측면에서 키우기 힘든 돼지, 소와는 달리 염소는 기르기 쉽고 유목민 소득 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염소에서 생산되는 유제품과 육류가 유목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상황
-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몽골의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사막화 및 가축 생산성 저하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몽골 정부는 집약 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농식품부는 농산품은 채소산업 육성, 축산분야는 기존 목축 중심에서 농장, 즉 집약축산을 육성하여 목축과 집약축산을 5:5 비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몽골 내 집약 축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데 특히 농가의 낮은 경제력이 주요 요인임. 몽골 농민의 중위소득이 113만 투그릭(약 25만원) 정도로 조사되는데 이러한 소득으로는 시설구비가 필요한 집약 축산이 어려움.
- 그나마 이루어지는 집약 축산은 닭 정도이고, 몽골 정부에서 희망하는 소, 돼지 등에 대해서는 집약축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요구됨. 한국의 1950~60년대 각 농가별 집에서 풀어놓고 가축을 푸는 형식임.
- 장기적으로는 몽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유목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이농으로 인한 도시 집중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약 축산으로의 전환은 불가피
- 유목민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한파(주드)로 5개 아이막 전체에서 상당한 가축이 죽는 등 축산업에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

- 2021년에 사료 농사도 잘 하고 해서 건초도 잘 준비해줬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건초가 필요 없었어서 사료 농가들의 타격이 심했음.
 - 보통 추울 때 죽기 전에 가축들을 내다 파는데 날씨도 좋다보니 팔지도 않아서 육류 소비에도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
 - 몽골은 밀과 고기가 주식이라 이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다양한 금리 지원을 실시
 - 참고로 밀농사는 풍년이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은 기후 등 문제로 수확이 거의 안되었음. 2021년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잉여 농산물에 대해 보관 시설이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풍작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함.
- 한국에 “농사를 짓는 것은 신과 동업을 하는 것”이라는 속담이 있음. 농업 정책은 여러 불확실성으로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한국 농식품부도 해당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기후와 식량수요공급을 예측하는 관측본부를 만듦. 본부는 생산 재배면적, 농가수를 기반으로 생산 예측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관련 국제사회 정보 취득 및 관측을 통한 모형개발 및 전망을 진행함. 이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담
 - 2) 농산물 비축 인프라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공급과잉 농산물의 수요공급과 유통화에 기여함. 예를 들어 쌀의 경우 민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 외, 정부가 구매해서 3년 이상 쌓아두고 관리하여 공급소비 변동성에 국가가 적극 대응함.
 - 실제, 쌀은 최근 10여년 간 지속 공급 과잉인 상태로, 소비로서 쌀을 넘어 쌀을 원료로서 가공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3) 공급과잉 농산물에 대해 수출시장 개척 및 식량제공을 통해 수출 및 국제협력 측면에서 활용

< 사진 >



10. 몽골양모생산자협회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11일(月) 09:00~11:00, 양모생산자협회
- 참석: 간바트 베렌바랄 회장, 잉크투르 부회장, 에덴바트 사장 등(몽골 양모생산자협회),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협회에는 395개의 양모생산 사업자가 소속되어 있으며 몽골의 5개 가축 중 양, 낙타, 야크 3개 가축의 털을 양모로 생산 가공함.
 - 30년 전 사회주의 국가였을 당시, 협동조합 형식으로 모든 모 생산자 협회는 1개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2010년부터 선진국처럼 양털, 캐시미어 두 개의 생산자 협회로 별도로 운영

- 2010년 이후 원재료 인하로 인해 양털 생산 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캐시미어 양털 생산자를 별도로 나눠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
- 현재 협회는 원재료 1kg당 500~1,000투그릭 이었던걸, 국가에서 2,000 투그릭을 보조해줘서 3,000투그릭까지 올리는 방향을 요청 중
- 생산자, 협회, 직간접 지원 등 양모 생산자 대상 보조금 지원 정책 현황을 논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금성 보조금은 생산자에게만 지원되고 기타 업체에 제공하는 업자에게는 1KG당 1,500투그릭을 지원
 - 생산협회 같은 가공업자에게는 용자(캐시미어 구매 비용, 공장 운영비), 소규모 생산업자가 기계장비 구입시 부가세 관세 면제, 양털 및 낙타털 원재료 구매 시 구매비용 부가세 면제 등을 지원
 - 가공생산업체가 받는 지원은 기자재 수입시 관세부가세 면제, 유리한 용자지원, 구매비용 부가세 면제가 해당
 -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지원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부가세 면제 정도만 지원되고 있음.
- 양털 발전방안 및 한국에의 요청사항
 - 양털 가공업 등 몽골의 경공업은 사회주의였던 1970~80년대까지는 발전하는 산업으로 당시 최종 상품까지 생산하였음. 그러나 시장경제 후 대다수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고, 중국 등 인접국의 경공업이 발달하며 몽골의 경공업은 투자와 지원이 끊기며 산업 발달에 실패
 - 현재 몽골은 양털 총 생산품의 80%를 세척만 거친 후 원료형태로 모두 중국에 수출하는 실정인 바, 몽골 정부가 자국 양모업체가 원료생산 넘어 최종상품까지 제조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이 필요함.
 - 세계 캐시미어의 상품의 50%는 몽골산품이며, 양털, 야크, 낙타털도 세계적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기에 이를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게 중요
 - 한국은 제조업 선진국이므로 제조업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 및 전략을 몽골 정부부처에 이해시켜주기를 희망. 무엇보다 생산자 개인을 넘어 산업육성 측면에서 정부의 전략이 필요함을 피력해 주었으면 함.

- 경공업을 대상으로 한 몽골 정부의 지원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 현재 경공업 수입의 25%를 세금으로 내기에, 이 상태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음.
 -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 외국기업에서 원재료만 사가는 게 아니라, 몽골에 투자를 해서 같이 최종산품까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험을 공유해줬으면 함.
 - 외국인 투자자가 있긴 하나 대다수는 중국인이고, 원재료를 세척해서 가져가기만 하기 때문에 몽골 국민과 경제에 기여하지 않음.
- 한국 출장단이 몽골의 캐시미어 팩토리 방문 결과 품질이 뛰어나고, 한국의 고급백화점에도 입점하는 등 직수까지 늘어나며 상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 캐시미어 산업은 한국의 섬유산업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나일론 등 하우스섬유와 면을 가지고 OEM 형식으로 산품을 생산하였고 이는 7~80년대 중점산업이었음.
 - 한국의 섬유산업은 현재 중국 등과의 경쟁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전락하였지만, 디자인, 한국의 고유문화를 접목한 자체 브랜드화, 박람회 및 디자인스쿨 지원 등을 통해 패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몽골 측도 이러한 부가가치 개발, 정부의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측면에서 정부 측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시행중인 몽골에 적용 가능한 정책들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의 KOTRA는 가공품 수출 및 현지개척을 지원함.
 - 농식품부 유통공사서 해외사무소 및 업체 수출상담 등을 통해 통관, 검역 및 현지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몽골에도 적용 가능한 참고 사례임.
 - 청년인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인력과 관련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자료조사 및 현장 마케팅 등을 지원
 - 몽골에는 경공업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기에, 관련 전문학교 설립 및 이에 대한 등록비 면제와 현장실습 기

- 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정부당국과 산업계가 협조할 필요
- 수출 바이어 박람회를 정부가 운영하여 컨설팅, 바이어 협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정부가 업체의 수출 통로 개척에 채널 및 비용 측면을 지원
 - 물류인프라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으로 상품 수출 시, 양국간 협이에 근거한 보세구역을 만들어 비용 절감 및 운송 안전 등을 국가가 보장
 - 보세 구역은 “공공무역구역”으로서 통관구역 안에 관세를 물리기 전에 있는 공간으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비용을 내거나 공간이 적을 경우 배에서 머물며 유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 결국 산업 발전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해외의 기술도 유입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보장장치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광물, 건설 분야에 한해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결론적으로, 세계 양털과 캐시미어 원료의 50%가 몽골인 바 이를 공개적으로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몽골 정부에서 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목적과 전략이 분명해야 함.
 - 단계별로 정책을 세워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즉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원료 유출을 방지하고, 2040년까지는 최종산품만 수출한다 등), 수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을 세워야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임.
 - 국가에서는 보조금보다는, 공기업과 국가기관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몽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즉 최소한 공공목적의 경우 국내품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식의) 공공정책을 실시할 필요도 있음.
 - 현재 몽골에 값싸고 질 낮은 품질만 넘쳐나며 몽골 국민들도 저가 제품들만 선호하는 바, 몽골 정부의 지원을 통해 몽골에서 자체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국민도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최근 여러 국제 바이어가 몽골의 직조기술과 디자인을 통한 최종산품이 개선되면 수입하겠다는 의향도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임.
 - 한국의 클러스터 발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언급해서, 몽골도 경공업

클러스터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사진 >



양모생산자협회 미팅

11. 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11일(月) 14:00~16:00, 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 참석: 최만영 소장(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바트조릭 사무관(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몽골은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물가 상승과 대내외적인 재정 관리 부실 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음.
 - 몽골 정부에 따르면 올해 물가가 9.6% 상승하였으나, 체감상으로는 7~80% 이상 상승한 것 같음. 배추의 경우 한 포기 1만 투그릭에서 현재는 2.5만 투그릭임.
 - 다자개발은행이 몽골에 프로젝트 기반으로 융자한 3.2조 중 7~80%의

상환이 부실한 상태. 차관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신 정치권과 고위 관료가 결탁하여 일단 용자를 실시한 뒤 상환을 하지 않는 상황

- 몽골의 농산물 생산 대안으로는 유리온실,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데 유리온실은 비용문제, 스마트팜은 생산성 및 유지관리 문제가 있는 반면 비닐하우스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몽골의 기후여건 상 노지에서는 5~8월 사이에만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데, 비닐하우스 활용 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과채류 대신 엽채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 기간을 3~10월 까지 늘릴 수 있음.
 - 일본에서 유리온실 육성 사업 "Everyday Farm"을 실시하였으나 온도, 건조권, 수분 문제 등 여러 기후 여건이 열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커서 결국 사업은 실패하였음.
 - 몽골의 겨울은 영하 4~50도까지 내려가고 겨울과 여름 사이 밤낮 길이 차이가 커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반 설비 구축과 운영비용 지출이 클 수밖에 없음.
 - 스마트팜도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몽골 겨울의 일조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여 보조 광을 설치해야하기에 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불가피
 - 비닐하우스는 유지보수가 중요한데 우박, 폭설, 폭우 등이 없기에 유지보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임.
- 결론적으로, 몽골에서 채소 자급자족과 수급해결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실제 사업성도 높으나 인력양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이 관건이고 시설 원예의 경우 숙련된 인력과 관련 경험이 상당히 부족
 - 한국이 전문가와 기술을 전수하고 몽골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면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임. 실제 몽골 정부는 온실사업 시행 농가를 대상으로도 야간 및 겨울에 난방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음.
- 한국은 KOICA, 농식품부, 산업부, 농경연 등을 중심으로 몽골과 농림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 중
 - KOICA 사업으로 400만불 규모의 스마트온실 사업과 500만불 규모의 수의진료역량강화, 400만불 규모의 축산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 KOPIA는 농가의 전반적인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범마을사업”을 실시중이고 기존에 “교육훈련농장”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시범마을사업은 4개 지역 총 80농가를 대상으로 3년 총 60만불을 지원하여 해당 마을 농가의 사료작물 종자, 생산된 사료작물을 활용한 가축사양 효율성 제고 등을 지원
 - 교육훈련농장 사업은 2014~17년 18만불을 지원해 4개의 비닐하우스, 겨울온실 1개, 관정시설, 교육장, 창고, 소형농기계 등 총 2.5헥타 규모의 훈련소를 제작해 몽골의 농업교육훈련을 지원한 뒤 농림부에 이관
 - 코피아의 프로그램은 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유목에서 정착 축산으로 전환하여 초지 자체와 함께 초지 생산성을 보호하는 데 한국 정부가 기여하고자 하기 때문임.
 - 아울러, 농가 소득 보전 측면에서도 다른 가축 대비 소가 적절함. 사실상 몽골에는 단일 축종하는 농가가 많지 않고, 사실상 유목민들은 소수의 염소, 양, 말, 소를 모두 섞어 축종하는 실정임.
 - 몽골 정부 차원에서도 종자 기금을 통한 종자 제공, 농자재 구입 시 세금 감면, 유류 보조, 심각한 한파(주드)에 대비하여 정부가 건초를 구매하여 농가에 싼 가격으로 방출하는 등의 다양한 농가 지원책 실시
- 몽골의 농업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및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동유럽권 등이 앞다투어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여러 방면으로 협력이 가능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실행 중인 스마트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몽골 정부와 협력이 가능할 것임. 베트남 등에서는 스마트팜을 모듈로 지원해준 사례도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지난 10년 이상 몽골의 채소재배를 지원한 바 있는데, 몽골 국가 차원에서 “채소품귀” 등이 일어나는 현재 후속 협력을 통해 한국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의 농산물 재배 시 열악한 기후여건을 해소하기 발전소 인근에 농업 시범 집약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의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를 활용한 제주 망고 농가 등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농민단체, 협동단체, 자조금 단체를 만드는 것은 몽골 정부와 농가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가능한 정책이며, 농가에서 해당 단체를 위해 설비 지원과 하우스 단지 형성 등을 지원하면 좋을 것임.
- 한국은 부처, 지자체, 각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규모도 여타 국가에 비해 크지 않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바, 몽골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

< 사진 >



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소장 면담

< **III-4. 현지전문가 미팅 및 종료회의** >

12. 현지전문가 연구회의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12일(火) 10:00~12:00, Tom N Toms 커피숍
- 참석: 칸드수렌 교수(몽골농업대학),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현지전문가와 세부실태 결과 점검 및 연구 진행경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
- 본 출장 이후 아래의 자료를 획득하고 분석하기로 논의
 - 밀과 채소 대상 보조사업의 연도별 보조지급을 위해 계획된 금액, 실제 보조 집행 금액, 수혜농가 및 업체 수와 지역(아이막) 별 분포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 보조사업별 대상 품목 및 예산 결정 방식, 보조 대상자 선정·집계 및 통계화 방식, 보조 예산 관리 방식, 농업부와 재무부 및 중앙은행 간 보조금 집행 거버넌스, 보조집행 후 성과 및 평가 방식
 - 몽골의 보조사업 지침서 및 세부시행령 존재여부 및 관련 자료(보조사업 목적, 근거, 연도별 재정투입, 사업관리, 사업시행-자금배정-자금집행-이행점검-성과측정-평가 및 환류 등의 표준프로세스 세부 내용)
 - 보조사업 별 사업 시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점
 - 중간보고서 내 몽골 통계, 시행 프로세스, 그림 자료의 수치 및 내용 오류 파악 및 단위 일원화
 - 한국 연구진의 보조금 수혜자 체감분석 설문조사 설계 후, 해당 설문조사 추진 협조 가능여부 검토

13. 세부실태조사 종료회의

- 일시 및 장소: '22년 4월 12일(火) 15:00~17:00, 농식품경공업부 및 인근 식당
- 참석: 강조릭 과장, 바트조릭 사무관, 타난 사무관, 앙크미셸 사무관(이상 농축산경공업부), 한국 출장단 전원, 절버 통역사
- 주요 논의 내용
 - 향후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몽골의 농축산업 시계와 정책 일정을 고려하여 6월 중순 방한하여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를 실시하고 8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논의
 - 현실적으로 농가에 방문 및 체류하여 진행해야 하는 보조금 수혜자 체감

분석은 실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 몽골 농림부와 몽골농업대학 측에서 대리 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 측에 회신할 계획

- 양 측간 원활히 자료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몽골농업대학의 칸드수렌 교수를 몽골 측 연구책임자로 지정한 바, 몽골 농림부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협조를 당부